

추석연휴 1주간 학생 3만7286명 확진...44% 감소

일평균 5327명...연휴 중 감소 영향인듯 수도권 48%...경기 9868명·서울 5302명 신고앱 참여율 낮아...“집계 바뀔 수 있다”

추석 연휴가 겹친 지난 1주일 동안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 3만728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주 전보다 44.2% 감소한 수치다. 교육부는 지난 6~12일 학생건강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고된 코로나19 확진 유·초·중등 학생은 전국 17개 시도

에서 총 3만7286명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는 1주 전인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집계된 6만6858명보다 2만9572명(44.2%) 감소한 규모다. 지난 6~12일 하루 평균 5327명의 학생이 확진됐다. 올해 3월부터 누적 확진자는 264만3367명으로 늘었다.

연휴 기간이던 지난 9~11일 신고된 학생 확진자 수가 다른 날보다 적었다. 6일 8394명, 7일 7335명, 8일 6906명이 신고됐던 것과 달리 9일 3004명, 10일 2564명, 11일 3515명으로 2000~3000명대까지 줄었다. 다만 대체공휴일인 지난 12일에는 5568명이 신고돼 다시 확진자 규모가 늘었다. 초등학교가 1만8119명으로 전체 48.6%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중학생 1만518명(28.2%), 고등학생 7022명(18.8%), 유치원생 1459명(3.9%) 등 순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에서 모두 1만7760명이 신고돼 47.6%를 차지했다. 경기 9868명, 서울 53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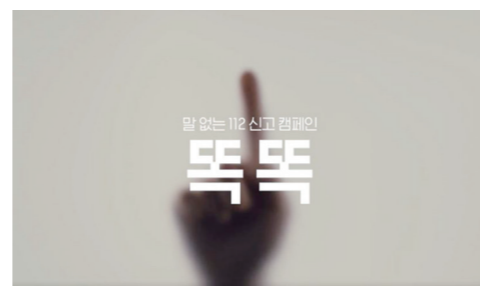
명, 인천 2590명이다. 비수도권 학생 확진자는 1만9526명(52.4%)이다. 경남 2841명, 대구 2349명, 경북 2046명, 충남 1942명, 부산 1775명, 전북 1453명, 전남 1336명, 광주 1279명, 대전 1260명, 충북 967명, 강원 823명, 울산 738명, 제주 360명, 세종 357명 순이다. 교직원 확진자는 같은 기간 총 4513명이 집계됐다. 같은 기간 국내 전체 확진자(43만3492명) 중 18세 이하(8만9533명) 비율은 20.7%, 학생은 8.6%였다. 교육부는 학생과 교직원이 방역 당국에서 코로나19 확진을 통보 받으면 학생건강 자

기진단 앱을 통해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앱을 통해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다고 답변하면 등교하지 말 것을 안내한다. 자가진단 앱 참여율은 추석 연휴 전날인 8일 66.4%였지만, 연휴 기간인 9일 0.9%, 10일과 11일 각 0.3%, 12일 1.5%로 크게 떨어졌다. 교육부는 “추석 연휴 기간 자가진단 앱 참여가 낮아 시도교육청의 추가 정정 보고에 따라 이날 발표한 확진자 발생 규모 현황이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선욱기자



침수지역 감염병 예방 집중 방역 14일 태풍 힌남노 피해 침수지역인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시장에서 포항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말하기 어려운 위험 상황에선 ‘똑똑’으로 112신고 하세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등 위급한 상황에 가해자와 함께 있어 말하기 어려울 때, 112에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 숫자 버튼을 똑똑 누르는 것으로 신고가 가능해진다. 2018년 2월 경기남부경찰청에 ‘자장면 두 그릇을 갖다 달라’는 전화가 걸려 왔다. 당시 신고자는 모텔에서 헤어질 남자친구에게 폭행

휴대전화 숫자 버튼 ‘똑똑’ 누르는 것으로 신고 가능

당한 뒤 중곡집에 전화하는 척 경찰에 신고해 위기에 벗어났다. 이처럼 누군가와 통화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지만, 위험 상황에 대화조차 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이에 경찰청이 음성 대화 없이도 상황을 전달할 수 있게 하는 112 시스템을 홍보하는 ‘똑똑’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112에 전화를 걸었지만 대화를 이어 나가기 힘든 경우 숫자 버튼을 똑똑 눌러 말하기 곤란한 상황임을 알리면, 소리를 들은 경찰이 말 없는 112 신고인지 확인한 뒤 신고자의 핸드폰 카메라로 현장을 볼 수 있는 ‘보이는 112’ 접속 링크를 문자로 전송한다.

접속 링크를 클릭하면 LBS(위치 기반 서비스) 요청 없이 경찰이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자는 구글 웹 화면을 통해 경찰과의 비밀 채팅이 가능하다. 경찰은 실시간으로 신고 현장을 보며 보다 정확한 초동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경찰은 이 같은 신고 방식을 전국 112 상황실 요원 4800여 명에게 교육했다고 전했다. 한편, 신고 방법이 쉬워진 만큼 이를 악용한 허위 신고 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최이슬기자

이준석, 법원 출석...“법원 판단 불복 다루는 것이라 순탄할 것”

“소급·처분적 당헌 개정...법원, 큰 고민 없이 판단할 것”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대해 “어차피 지난 가처분에서 법원에서 일정 부분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불복하는 것을 다루기 때문에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당헌 개정안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전 11시 이 전 대표가 낸 국민의

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심정을 심문한다. 이날 심문에선 정진석 비대위 출범의 근거가 된 ‘비상 상황’을 규정된 당헌96조 1항의 합리성을 놓고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양측이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표는 “어떤 부분을 쟁점으로 소명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당헌 개정이 결국에는 소급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고 처분적인 당헌 개정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것을 큰 고민 없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

각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이 4차 가처분 신청 관련 심문 기일 연기를 신청한 데 대해선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라 판사님 재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말하면 이게 소급된 어떤 당헌 개정이고 처분적 당헌 개정이라 문제가 크다고 법률가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새 비대위 출범에 배후가 있다는 식의 주장을 편 데 대해선 “정치적인 사안은 나중에 얘기하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김재환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털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